

경찰수사론

5주차

이정덕 교수

Ⅲ. 불심검문

1. 개념 :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진압을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함.(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2.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은 수사의 처분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3. 대상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아래의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①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②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③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4. 정지와 질문

정지	의의	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 거동불심자를 불러 세우는 것
	실력행사	질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 (예)앞에서 가로막거나, 배후에서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
질문	증표제시	질문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질문	행선지.출발지.용건.성명.주소.연령.가정상황 등
	강요금지	불심검문은 임의수단으로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임.

5. 동행요구

- (1) 목적 및 사유 :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인에게 부근의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 ②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 (2) 절차
- 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②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 후 언제라도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③ 경찰관은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 ④ 임의동행시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⑤ 동행시 양쪽 팔을 잡는 등 강제연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소지품 검사

- (1) 의의 :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수사상 강제처분인 수색과 구별됨.
- (2) 허용범위 : 거동수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3) 한계 : 외표검사(Stop and Frisk), 즉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의복·휴대품의 외부로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까지 가능. 개시요구는 강요적 언동이 아닌 경우 가능.

I. 범죄수사의 방법

- ① 수사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형소법 제199조 제1항)
- ② 범죄수사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두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임의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 ③ 강제수사는 강제수사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
- ④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법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요구된다.

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수사	강제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요구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 실황조사 -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 축탁수사 - 공무소 등에서의 사실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구속 - 압수.수색.검증(임의제출물의 압수 포함) - 통신제한조치 - 수사상 감정유치 - 수사상 증거보전 - 수사상 증인신문 - 기타 감정에 필요한 처분

I. 의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승낙(동의)를 얻어 행하는 수사방법 -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지 말고 임의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배려를 해야함
임의수사원칙	- 수사는 되도록 임의수사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수사비례원칙	- 임의수사도 필요한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II. 출석요구

개념	- 수사기간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 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해야한다. -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하게 재소환하는 일이 없도록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Ⅲ. 피의자 신문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성의 확보 (범죄수사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 조사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 등 고지	고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고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명시적, 사전고지 - 신문시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 단,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신문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조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한다. -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의의	<p>-. 사법경찰관은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p> <p>*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p>
목적	<p>-.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p>
신청권자	<p>-.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직계친족.배우자.형제자매.법정대리인</p>
고지	<p>-.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의 참여 하에 신문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한다.</p> <p>*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p>
신청	<p>-. 경찰관은 참여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p>
참여 변호인 지정	<p>-.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p> <p>-. 피의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소법 제243조의2)</p>
신문 중 제한	<p>-.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법경찰관의 승인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②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③ 변호인 참여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④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p>*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하는 것은 제외</p>

의의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소법 제244조의2)
고지	-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다음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는 불필요(피의자 아닌 자 진술녹화시는 동의 필요) ①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②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 ③조사 및 참여 사법경찰관리 성명과 직급 ④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⑤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⑥조사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참여자	-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리 등의 참여자는 조사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녹화범위	-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진술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조사의 객관적 정황확보를 위해 진술자가 조사실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영상녹화 할 수 있다.
녹화물 작성봉인	- 영상녹화를 종료한 이후 2부의 영상녹화물을 작성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된 영상녹화물 중 1부는 원본으로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부분으로서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원본 봉인시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봉인전 재생	- 원본 봉인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케하여야 한다.

IV. 참고인조사

참고인이란?	- 피의자 아닌 자
참고인조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출석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출석의무가 없음) -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시 구속영장에 의하여 강제구인 가능(국가보안법 제18조 제1항)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 없음
진술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은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 참고인과 조사를 행한 자 및 참여자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진술녹화 (영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도 영상녹화 가능(형소법 제221조 제1항) -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진술자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 -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동석 가능(형소법 제221조 제3항) -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사 지장 우려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V.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의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받은 자의 수락여부는 그의 자유임(거부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
- 감정의 위촉 :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에 게 그 학식.경험을 토대로 한 경험법칙의 결과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판단의 결과를 알려 주도록 요청하는 수사방법
- 실황조사 :
 - ①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관련 장소.물건.신체 등의 존재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실험.경험.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
 - ② 실황조사는 실무상 검증과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강제력이 따르지 않고 검사의 자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과 구별됨
-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 ①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범죄경력, 전과, 신원 등을 조회하여 그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199조 제2항)
 - ② 조회를 의뢰받은 자는 회답의무가 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 촉탁수사
 - ① 공조수사의 일종으로 타 수사기관에게 일정한 사실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
 - ② 촉탁사항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사의 성질상 직접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장수사
 - ③ 의뢰받은 관서에 수사를 강제할 수 없음

I.의의

개념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강제로 수사하는 방법
강제수사 법정주의	-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영장주의	- 강제수사의 경우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법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주의 예외	①긴급체포 ②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③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④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⑤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사후영장) ⑥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사후영장) ⑦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반드시 사후영장) ⑧변사체 검시 후 긴급을 요할 때의 검증(반드시 사후영장)
수사비례 원칙	-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의 요건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행하여야 한다.
내사단계 강제처분	- 내사단계에서는 내사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대물적 강제처분은 허용된다.
종류	①체포.구속 ②압수.수색.검증 ③통신제한조치 ④수사상 감정유치 ⑤수사상 증거보전 ⑥수사상 증인신문 ⑦기타 감정에 필요한 처분 *임의제출물의 압수도 강제수사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II.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의의

체포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구속의 이전 단계	-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의 전 단계 처분 *구속 전에 반드시 체포가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 체포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
영장주의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영장주의), 영장주의의 예외 :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2. 요건

범죄혐의의 상당성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체포요건인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혐의를 요한다.
체포사유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 *피의자A와 참고인 B에게 3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A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체포, B에 대해서는 강제조치 불가능
경미범죄 특칙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

3.체포절차

①체포영장신청서 작성 → ②체포영장신청부 기재 → ③체포영장 신청 → ④체포영장 청구 → ⑤체포영장 발부
→ ⑥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 → ⑦피의사실 등 고지 → ⑧체포영장 집행원부 기재 → ⑨체포통지(24시간 이내)
→ ⑩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48시간 이내)

체포영장
신청서
기재사항

-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않은 경우 인상, 체격, 그 밖에 특정가능 사항),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체포영장
집행

- ~~검사지휘~~ :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영장제시 :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집행 : 체포영장 발부 + 영장미소지 + 급속을 요할 때, 영장발부 사실 고지 후 집행
영장집행완료 후 신속히 체포영장(원본)제시

체포통지

- 통지시한 :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대통령령), 형소법은 '지체없이'통지하여야로 규정
- 통지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 영장신청 : 체포 후 36시간 이내
- 영장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 구속기간 :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10일)

석방

-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검사의 지휘 필요)~~

체포적부
심사청구

-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의2)
-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Ⅲ. 긴급체포

1. 의의

-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범인 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임

2. 요건(다액 50만원 이하의 경미사건 특칙이 없음)

체포의 긴급성	-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등)
범죄의 중대성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3년이하 징역, 2년이상 징역, 무기 또는 2년이하 징역 모두 해당
체포의 필요성	①도망, ②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주거부정이 아님을 주의해야함
재체포의 제한 (영장필요)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증거를 인멸할 경우도 불가

3. 요건의 판단

체포당시 상황판단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함
합리적 판단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임

4.절차

①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②긴급체포 → ③긴급체포서 작성 → ④긴급체포원부기재 → ⑤긴급체포 승인건의 → ⑥긴급체포 통지 → ⑦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피의사실 등 고지	①피의사실의 요지 ②체포이유와 ③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④변명할 기회를 준 후 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
긴급체포서 작성	- . 긴급체포 즉시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서를 작성 *긴급체포를 사법경찰리가 하였을 때에도 긴급체포서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한다.
긴급체포 승인건의	①긴급체포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 검사에게 승인건의 ②타시도 검거 시 24시간 이내 : 광역자치단체 기준 ③모사전송 활용 가능 : 원칙은 서면 ④ 검사의 불승인 시 즉시 석방
체포통지	- . 통지시한 :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대통령령), 형소법은 '지체없이' 로 규정 - . 통지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신청.청구	- . 체포 후 지체없이(체포 후 48시간 초과 불가)(형소법 제200조의4 제1항) - . 영장청구시 긴급체포서 첨부
석방 및 석방보고	-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한 경우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고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포적부 심사청구	- .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형소법 214조의2)

모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